

**정부, 환경의 날 31명 포상** .....

정부는 지난 6월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이한동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계 인사와 민간 환경단체, 명예환경감시원, 산업체 임직원 등 3천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환경보전에 공로가 큰 개인과 단체 등 31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다음은 훈·포장 및 대통령 표창 수상자 명단.

- ◇국민훈장동백장 ▲권형기 한라산업 개발 대표이사 ◇녹조근정훈장 ▲최병래 서경관대 교수 ◇국민포장 ▲정성희 동아일보 차장 ▲고병준 북한산관리사무소장 ▲정홍기 유한킴벌리 전무이사 ▲이인식 마·창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근정포장 ▲이영수 충북도 지방환경서기관 ◇대통령표창 ▲이종영 경북대 교수 ▲제39 보병사단 ▲박은경 환경과 문화연구소장 ▲LG화학 청주공장 ▲제성호 성광엔비텍 대표이사 ▲조중래 SK주식회사 안전환경기획팀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김재복 수원시 지방보건사무관 ▲사단법인 전국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 ▲현인환 단국대 교수 ▲김재승 하천사랑운동 대표

**낙동강 부담금 이달부터 부과** .....

낙동강 수계의 기금 운영 계획에 따라 낙동강을 낀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낙동강 수계의 기금 운영 계획에 따라 낙동강을 낀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이용 부담금이 t당 110원 정도씩 인상돼 이달부터 첫 부과된다.

이는 지난 1월 공포된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

이용 부담금이 t당 110원 정도씩 인상돼 이달부터 첫 부과된다.

이는 지난 1월 공포된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

거둬지는 낙동강 물 이용 부담금은 낙동강 주변의 하수처리 관거, 분뇨처리 및 축산 폐수시설 개선 등에 집중 투자돼 낙동강 수질을 2급수로 유지하는데 사용된다.

낙동강 물 이용 부담금은 안동, 상주, 구미 등 낙동강 물을 상수도 원수로 사용하는 모든 지자체의 상수도 급수 구역에 부과되는데 상수도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상수도 요금 인상분은 한달 평균 25t 물을 사용하는 아파트 입주민의 경우 월 2천800원 정도가 예상된다.

경산시 경우 연간 예상되는 이용 부담금 부과액은 21억원 정도다.

경산시청 정재영 상하수도 과장은 "낙동강 물 부담금은 경북북부 지역에서부터 부산·경남 일대에 이르기까지

낙동강 물을 이용하는 모든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부과되며 지난 한달 동안 홍보를 거쳐 이달부터 첫 부과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염색업계] 환경부담금 미상**

염색업체가 올 하반기부터 부과되는 각종 환경분담금으로 제조원가 상승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여기에다 염색가공료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하반기부터는 채산성 악화에 따른 기업의 연쇄 도산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 7월부터 바로 제조원가 상승에 포함될 환경분담금은 물이용 부담금.

한강의 경우 99년 8월부터 톤당 80원에 이어 지난해 3월부터 톤당 110원이 부과되고 있는 물이용 부담금이 올 7월 15일부터는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 섬진강 수계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염색조합 소속 399개 회원사중 절반 이상인 대구·경북지역 회원사 192개사, 그리고 부산·경남지역에 위치한 69개사의 일부가 7월부터는 물이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올 9월부터는 또 해양환경개선 부담금도 납부해야 한다.

최고 톤당 4,155원을 부과, 매년 200억원을 조성하는데 아직 부담금 산출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국염색공업협동조합측에선 200억원중 최소 30억원 이상이 염색업체에서 분담해야 될 몫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다 염색제품의 수주 경향이 중국산 제품에 밀리면서 대량 중장기납품에서 다품종 소량 중심의 단납기 납품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당장 제조원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염색업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단납기가 늘면서 적기 납품을 위한 야간 초과작업으로 인건비가 높아지고 잦은 작업교체에 따라 물 사용량 등이 많아져 제조원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염색가공료는 치열한 수주 경쟁 등으로 올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더욱이 3~6월 성수기가 끝나면 염색가공료가 통상 낮아진다.

이에 따라 염색업체들은 올 하반기 채산성 악화에 대비, 환경부담금 최소화를 위한 연판장 돌리기, 공청회 적극 참여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 공주, 환경훼손 신고 포상금제 운영

공주시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지키는 일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훼손행위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한다.

환경훼손행위 신고 포상금제는 환경오염 등 환경훼손에 대한 시민감시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폐수나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공장매연, 악취 불법배출행위, 국립공원내 자연훼손행위 등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최고 100만원에서 2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최근 4대강 환경감시대, 중앙환경단속반, 지자체 등이 지난 한해 동안 전국 7만 4,466개의 폐수배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5,099개의 위반업소(위반율 6.8%)를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고요령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훼손 행위를 했는지를 환경관리청, 환경감시대 및 환경보호과에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들이 환경훼손 행위를 감시한다면 보다 깨끗한 공주의 자연환경을 보존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환경보호 운동의 참여와 실천을 당부했다.

## 명지대, 바이오기술로 폐수처리

‘환경오염, 바이오기술로 해결한다.’

명지대 환경생물공학 연구실은 환경공학과 생명공학을 접목해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연구와 연구성과의 제품화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생물공학연구실에는 현재 책임자인 정옥진 교수를 중심으로 2명의 교수와 18명의 대학원생 연구원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주요 연구로는 ‘지방성분 함유폐수 처리를 위한 처리장치 개

발’, ‘악취제거를 위한 바이오필터장치 개발’, ‘황산화반응을 이용한 탈색기술 개발’, ‘톱밥을 사용하지 않는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슬러지(침전물)의 퇴비화공정 개발’ 등이다.

특히 지방을 함유한 폐수 처리장치는 국내 하수처리장에 주는 부담과 기름성분에 의한 하천오염을 해결할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방성분이 포함된 폐수는 하수관 표면에 붙어 ‘기름막’을 형성해 하수관이 막히는 현상을 유발하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하수 수송을 방해하기도 한다.

정 교수팀은 폐수처리시설에서 지방폐수를 처리하기에 앞서 배출업소자체적으로 지방성분을 걸러내는 전처리장비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정 교수는 “국내 실정에 알맞게 개발한 전처리장치인 ‘포그 트랩(FOGTrap)’이 지방성분 때문에 생기는 폐수처리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폐수배출 3년만에 감소

지난해 폐수배출 업소의 불법행위가 3년만에 처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최근 4대강 환경감시대, 중앙환경단속반, 지자체 등이 지난 한해 동안 전국 7만 4,466개의 폐수배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5,099개의 위반업소(위반율 6.8%)를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최근의 폐수 배출업소의 위반율은 지난 1998년 5.8%에서 1999년 6.1%, 2000년 7.7%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단속주체 별로 보면 4대강 환경감시대는 지난해 한강과 낙동강 등 상수원 인근 2만 3,330개의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2,758개의 불법업소를 적발했다.

위반율이 11.8%에 달했으나 전년도 12.7%보다는 다소 감소했다.

또 환경부가 운영하는 중앙단속반이 지난해 실시한 단속 업소의 위반율도 24.3%로 전년의 25.2%보다 줄어들었다.

### 군산 하수종말처리장 본격 가동

전북 군산시 하수종말처리장이 12년 만에 모두 완공됐다. 최근 군산시에 따르면 시내 소룡동 국가산업단지내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날 완공돼 시내권에 서 발생하는 하루 17만t의 생활하수를 모두 정화처리 하게 된다.

지난 91년부터 추진해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국비 등 모두 1천726억원이 투입됐으며 하루 20만t의 생활하수 정화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

시는 이중 하루 10만t을 처리할 수 있는 종말처리장을 우선 완공해 99년 9월부터 가동한데 이어 이날 나머지 10만t 처리시설을 마무리해 준공식을 가졌다. 또 시외곽 농촌지역의 하수 처리를 위해 대야·임피·서수·회현·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 인천시 서구 오류동 주민 6명이 인근 주물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악취로 인해 가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배상을 요구한데 대해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 78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서면 등 5곳에 금년부터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본격 가동으로 군산 앞바다의 수질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수도권매립지 악취 예·경보시스템 도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이정주)는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첨단의 악취 예·경보 시스템을 설치, 가동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공사측은 우선 신공항 고속도로에 악취측정기 1대를 설치하고, 이달에는 매립장내에 2기를 추가로 가동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악취모델링 장비가 갖춰진 종합 악취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에 설치되는 악취측정기는 해당 지역의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메탄 등

13종의 악취물질과 풍향, 풍속 등을 동시에 측정할 뒤 결과를 전광판을 통해 3~10분 간격으로 실시간 제공하게 된다고 공사측은 설명했다.

또 악취모델링 시스템은 측정자료를 3차원 프로그램에 적용, 풍향과 풍속 변화가 심한 해안지역에서 악취물질의 이동경로와 강도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주변지역의 대책수립을 가능하도록 한다고 공사측은 덧붙였다. 공사측은 이밖에도 신공항 고속도로변의 환경정비를 위해 인천 경서동 쓰레기 적환장 폐쇄와 매립장 탈취제 살포강화, 침출수 조류시설의 덮개설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주물공장 악취 주민에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 인천시 서구 오류동 주민 6명이 인근 주물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악취로 인해 가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배상을 요구한데 대해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 78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주물공장인 H사(社)는 황동원료를 녹여 가정용 수도꼭지를 생산하는 업체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된 적이 있고 특히 고장난 오염방지 시설을 장기간 방치한 상태로 공장을 가동, 주물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놀과 아민계의 악취물질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위원

회는 밝혔다.

위원회측은 “수도권에 난립하고 있는 영세공장의 상당수가 오염방지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다”며 “H사의 결정을 계기로 유사한 피해배상 청구가 잇따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 운영되는 배출업소 1만328개의 배출업소 중 8천948개소를 단속한 결과 무허가 배출시설 1천255개소, 오염방지 시설의 비정상적 가동 75개소, 배출허용 기준초과 91개소 등 대상업소의 16%인 1천421개소가 대기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했다.

## 기대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금리 변경(인하) 신청 접수중 .....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鄭長燮)은 희망하는 모든 사업자(개인 포함)에 대해서 기대출된 융자금에 대한 금리를 변경(인하)해 준다.

적용대상은 2001년 9월27일 이전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대출 받은자로서 종전 대출금(고금리-최고 9%, 고정금리)을 현행 변동금리(2/분기 현재 6.25%)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사업자(개인 포함)이다.

금리변경을 원하는 대출자는 당초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2002년 6월 24일(월)까지 금리 변경 신청을 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鄭長燮)은 희망하는 모든 사업자(개인 포함)에 대해서 기대출된 융자금에 대한 금리를 변경(인하)해 준다.

적용대상은 2001년 9월27일 이전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대출 받은자로서 종전 대출금(고금리-최고 9%, 고정금리)을 현행 변동금리(2/분기 현재 6.25%)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사업자(개인 포함)이다.

나서 에너지관리공단의 변경 통지를 받은 후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을 변경하면 된다.

변경된 금리는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에 업체 반발 .....

경남 함안군이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허가했다가 뒤늦게 취소하자 업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업체는 민원 발생을 이유로 적법한 허가를 취소한 것은 선거를 의식한 행정이라고 주장,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법정 분쟁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진주 (주)삼우환경은 이달 10일까지 칠원면 무기리 1만9천여㎡의 부지에 시간당 200t 처리용량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공장을 짓기로 하고 농지전용 변경허가, 사전환경성 검토, 건설폐

기물 수집·운반업 적정통보 등을 거쳐 지난 4월10일 공사에 착공하려 했다.

당시 삼우환경은 주민의 반발이 우려돼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 마을로부터 200m 떨어진 지점에 폭 8m 길이 100여m의 진입도로를 건설한뒤 이 도로로 차량을 통행시켜 공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진입도로 공사현장 입구에서 소음·먼지 등 공해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들이 농성을 벌이는 바람에 지금까지 착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민원이 장기화되자 함안군은 지난 4월 21일 민원을 우선 해결해 달라며 사업중지 통보를 한데 이어 지난 5월 27일 이미 내줬던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를 취소했다.

이 같은 함안군의 취소 처분에 대해 삼우환경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내줬다가 취소한 것은 행정실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공무원이 회사를 찾아와 “가을로 연기하면 안되겠느냐” 등 말을 한 점과 현직 군수가 출마한 사실로 미뤄볼 때 선거를 의식한 일종의 부당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 업체는 지난 5월 업무방해 혐의로 주민 10명을 고소한데 이어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6월초 행정심판·소송과 수역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삼우환경이 이미 점유하고 있는 하천사용자의 동

의를 받지 않는 등 하천법을 어겼고 이곳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취소했을 뿐”이라며 “업체가 주장한 “가을 이후 연기” 등 언급을 한 적이 없으며 이번 선거와도 전혀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 환경관리공단, 대기오염 측정망 데이터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전국의 대기오염관리체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이석현)은 지난 6월 9일 ‘대기오염 측정망 데이터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16곳의 원격자동감시시스템(TMS)과 7개 지방 환경청이 운영하는 수십여개 TMS에서 수집된 대

전국의 대기오염관리체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이석현)은 지난 6월 9일 ‘대기오염 측정망 데이터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16곳의 원격자동감시시스템(TMS)과 7개 지방 환경청이 운영하는 수십여개 TMS에서 수집된 대기오염 데이터를 통합관리센터에서 실시간 분석할 수 있도록 노후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기오염 데이터를 통합관리센터에서 실시간 분석할 수 있도록 노후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각 지역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달라 대기오염 데이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분석이 힘들었던 것을 표준화 작업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것이 공단의 목표다.

환경관리공단은 지난 12일 사업설명회를 가진 후 입찰제안서 접수를 마감, 사업자를 선정해 1년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4억4100만원이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데이터전송 프로토콜이 각각 다르고 전송효율성도 떨어져 대기오염에 대한 빠른 대처가 힘들었다”며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